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5. 1. 5. Vol. 1

■ 농정이슈

2014년 주요 이슈 등

■ 정책브리핑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2015~2019) 수립

■ 연구지원

2014년 소비자물가동향

■ 현장여론

농업·농촌에 대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의견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금주의 핫 이슈

〈2014년 주요 이슈〉

- **FTA 추진** 정부, 영연방중국베트남 등 FTA 체결로 시장개방 확대, 한중일 FTA, TPP, RCEP 등 경제영토 확장 위해 2015년 타결 가속
 - **(한캐나다 FTA)** 타결 선언(2014.3.11.) → 가서명(6.12.) → 발효(2015.1.~)
 - **(한호주 FTA)** 실질 타결 선언(2013.12.) → 공식 서명(2014.4.8.) → 발효(12.12.)
 - **(한중 FTA 실질 타결 선언, 11.10.)** 상품원산지서비스 분야 핵심 쟁점 최종 합의, 한국 경제 영토 GDP 기준 전세계의 73.2% 확대
 -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 선언, 11.15.)** 이익균형 확보방안에 합의, 한·미/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 마무리
 -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 선언, 12.1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12.11~12.) 계기, 양국 정상은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 공식 선언
- **[쌀 시장 개방]** 20년간 미뤄왔던** 쌀 시장 개방, 쌀 산업 미래 위해 **△정부, 2015.1.1부터 전면 개방 공식 선언*(7.18), △쌀 관세율 513% 결정(9.18), △쌀 양허표 수정안 WTO 사무국 제출(9.30.)**
 - ※ 농업계 주요 요구사항: 고율관세 확보, FTA·TPP에서 쌀 양허제외, 직불금 단가 인상 등 농가소득안정장치 강화, 규모화 지속 지원,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소비 촉진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등
 - ※※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두 차례(10년씩) 걸쳐 관세화 유예, 국민 주신인 쌀의 상징성과 쌀 생산농가, 국민여론 등 감안한 조치
 - **(농식품부, 2014년 「쌀 안정생산대책」 발표, 4.1.)** 쌀 안정생산목표 415만 톤 설정, 벼 재배면적 82만ha 확보, 10a당 506kg 생산목표 설정
 - **(농가 소득안정 및 쌀산업 발전대책 수립, 9.18.)** △소득안정 강화, △규모화조직화 등 경쟁력 제고, △소바수출 촉진
- **[농식품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2015~2019) 계획」 확정발표, 12.29.]** 농어촌 지역개발, 정주여건 개선 위해 7개(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분야, 46.5조 원 투융자
 - ※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 7대 분야, 34.5조 원 규모): 보건복지, 교육, 기초인프라, 경제활동다각화, 문화, 환경경관, 지역역량

㉔ 농정이슈

- **[농식품부,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발표, 11.19.]**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2017년 까지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목표
 - ※ 농업을 ICT 융복합의 첨단기술집약 산업,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산업, 농산물의 부가가치 높이는 식품산업, 농촌경제 활성화하는 6차산업으로 육성
- **(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 개최, 11.19.)** △농업 경쟁력 확보, △6차산업화 통한 농가농촌 경제 활성화 논의, △기업-농가 상생협력 협약식 체결
- **[AI-구제역(FMD)-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 돼지고기 가격 강세 속 PED, FMD 및 올해 초 발생한 AI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 지속, 백신에 대한 논란도 제기
 - **(PED)** 2004.3. 이후 10여년 만에 제주지역에서 발생(4월)
 -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2개월 만에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이후 진천·음성·평택·청주·천안·이천 등 수도권까지 확산
 - ※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 개최(5.24~30., 프랑스)하여 우리나라가 구제역,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등 4개 질병에 대해 청정국 지위 인정하는 결의(안 채택(5.29)) 청정국 인증서 부여
 - **(AI)** 전남 영암·나주 등(9.24.)에 이어 최근 김제·경주·양산(12.12.)·나주(12.13.), 성남소제 모란시장 내 가금류 판매시설 추가 발생(12.26.) 등 전 세계적(미국·일본·독일·캐나다 등)으로 발생

<기타>

- **[농축산물 수급 문제]** 기상여건 양호로 생산량 증가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 되면서 소비 부진해 일부 채소(배추, 고추, 마늘 등)·과일가격 하락
 - **(낙농: 원유 과잉)** 원유 생산량 급증, 우유소비 부진 등으로 분유 재고량 12년 만에 최고치, 원유생산 감축 두고 갈등
- **[농식품 수출]** FTA 체결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2014.11월(누적) 농식품 수출액은 56.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 특히 딸가과자류 강세
 - **(엔저로 인한 수출농가 어려움)** 일본의 지속적인 엔저정책으로 인해 주력 시장인 일본 수출에 대한 채산성 악화, 수출업체 수출경쟁력 저하
- **[농경문화유산, 세계유산 잇단 등재]** 국내 농업유산 중 처음으로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4.1.). 우리 '농악'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11.29.)
- **[친환경농업 인증 강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으로** 친환경농업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사용되는 농자재에 대한 불신 심화되면서 정부, 민간 인증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인증심사원 자격 관리 강화하는 등 대책 발표

자료 / 참고 : 언론보도 및 정부 부처 보도자료

㉔ 농정이슈

□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 **[박대통령, 핵심국정과제(브랜드과제) 점검회의 주제, 12.29.]** 국무총리와 29개 부처·청 기관장 등이 참석, 각 부처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 점검, 향후 개선방안 논의
 - **(논의 내용)** △창조경제 혁신역량 강화, △통상협력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노후생활보장, △맞춤형 고용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등
 - **(향후 계획)** 논의 결과 바탕으로 국정과제 성과 제고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1월 중순부터 실시되는 4대 분야(경제혁신,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업무보고에 반영
- 자료 : KBS·SBS·문화일보(14.12.29.) / 국민일보·news1·NEWSis·머니투데이·세계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 투데이·연합뉴스·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2014.12.30.) / 농민신문(2015.1.2.)
- 참고 : 청와대 뉴스_「대통령, 「2014년 핵심국정과제(브랜드과제) 점검회의 개최」」(2014.12.29.)

□ 규제개혁 위한 규제기요틴 114건 확정

-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간합동 회의」 개최, 12.28.]** 총 153건 규제기요틴 과제 접수 받아 규제기요틴 114건 확정
 -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 규제기요틴 건의과제(153건) 현황 ■

총계(건수)	수용(114건)			수용곤란	추가논의 필요
	전부수용	부분수용	대안마련		
153	61	18	35	16	23
경제(84)	37	11	21	4	11
사회(69)	24	7	14	12	12

※ 수용 114건 기준: 법률 개정(36건), 시행령 개정(18건), 시행규칙 개정(8건), 기타 훈령·고시 및 비법령(52건)

■ 농식품부 관련 주요 내용 ■

구 분	과제명	기대효과
수 용	• 농지전용 규제 완화	• 지역적 특성에 따라 농지전용 범위 정하여 허용함으로써 개발 촉진
	• 밀양 농공단지 부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증설 예로	• 농공단지 확대 시 150억 원 투자효과
부분수용	• 비세척란에 대해서도 등급관 판정 허용	• 농가의 과도한 세척설비 설치부담 완화
수용곤란	• 회원인증제 시행	• (개요) 화훼업종의 무장벽 시장진입 형태로 인한 무자격 회원 난립

자료 : KBS·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세계일보·아시아경제·연합뉴스·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헤럴드경제(2014.12.29.)

참고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보도자료_「경제혁신의 지름길, 「규제기요틴」에서 찾다! - 민간합동 회의 개최, 규제기요틴 과제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 확정 -」(2014.12.28.)

㉔ 농정이슈

□ 2014년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 결과 표시율 96.4%

- [2014년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 10.15~11.15.] 양곡표시율 96.4%(전년대비 0.3%↑)
 - ※ 조사대상: 총 1,116개소(매매 1,036개: 대형유통업체, 생산자단체매장, 도·소매상 / 가공업체 80개: PPC, 임도정공장 등)
 - ※ 조사품목: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 혼합곡, 압착물, 전분류 등(의무표시: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도정년월일, 생산·가공자정보, 등급 / 권장표시: 단백질 함량)
- (취지) 소비자에게 양곡품질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 폭 확대, 양곡 부정유통에 선제적 대응
- (분석결과) 양곡표시가 정착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노점상과 서류(고구마감자), 맷쌀의 등급표시는 아직 미흡, 지도단속 강화 필요성 대두
 - ※ 노점상 53.9%, 서류 92.5%, 맷쌀등급 표시율 96.5% 중 “미검사” 표시가 75.2%

자료 : NEWSis연합뉴스(2014.12.30.)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2014년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 결과 96.4%」(2014.12.30.)

□ 정부, 배추·무 시장격리 추진

- [농식품부, 제13차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12.26.] 최근 작황호조 등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월동채소에 대한 수급안정대책 마련
- (배추·무) 가을작형 출하 지연, 저장물량 증가 및 소비둔화 등 고려, 겨울작형 시장격리(배추 4만 톤, 무 2만 톤) 및 소비확대 추진
- (당근·양배추) 재배면적 증가(15%13%) 및 가격 약세 지속으로 지자체 및 생산자의 자율 수급안정대책*과 소비촉진** 추진, 필요 시 시장격리 자금 매칭 지원
 - ※ 제주도 당근: 저급품 출하제한(6천 톤), 저장 확대(15천 톤), 세척당근 물류비 지원 / 제주도 양배추: 보리맥주·경관작물 전화유도 및 자체 시장격리(300ha) 추진
 - ※※ 당근: TV 기획방송, 라디오, 신문 홍보 및 상생마케팅 통한 특판 행사 추진

자료 : KBS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2014.12.30.) / 농축유통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5.1.2.)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배추무 시장격리 등 월동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 - 제1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결과 -」(2014.12.30.)

□ 버섯·감·약용작물류 등 통합 지원체계 마련

- [버섯·감·약용작물류 농산물임산물 구분 없이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협업 통해 연구개발 과제 수요 조사 및 조정, 기술지도 관련 자료 공동 활용, 사업지원 신청 등 원스톱 지원체계 도입

㉔ 농정이슈

■ 제도개선 주요 내용 ■

개선 전	개선 후
- 버섯류(양송이, 표고버섯 등), 감류(단감, 뽕감), 약용작물(황기, 당귀 등)은 농임산물 구분하여 각각 농식품부 및 산림청에 국비 신청 및 지원 - 농진청, 산림청에서 농임산물 품목 구분 연구(R&D) - 농임산물 구분하여 기관별 농임업인 기술지도 및 교육	- 농임업인 구분 없이 농림사업신청의 원스톱 지원체계 도입 및 공통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농임산물 구분 없이 사업비 신청 및 지원 - 연구과제 공동 수요조사 및 조정으로 중복배제 및 효율성 제고 - 기술지도 및 교육 자료의 공동 활용

자료 : NEWSis연합뉴스(2014.12.29.) / 농수축산신문(2015.1.2.) / 농촌여성신문(2015.1.5.)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버섯, 감, 약용작물 등 농임업인·임업인 구분 없는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2014.12.29.)

□ 구제역 및 AI 발생 현황

- [구제역 및 AI 발생] △구제역 양성 및 의심축 확인농장 현황(세부현황, 2014.12.29. 09시 기준): 총 21개 농장(신고 6, 역학 9, 예찰 4, 병성감정 2), △AI 상시예찰 과정 중 경기 성남 소재 모란시장*** 내 가금류 판매시설에서 AI 확진(12.27.)
 - ※ 살처분·매몰(12.3~12.29.): 22,821마리
 - ※※ 모란시장 50년 만에 장날 휴장, AI 발병에 수도권 확산 방지책
- (정부, 구제역·AI 확산 방지 위해 긴급방역) 전국 일제소독일시이동중지 조치(2014.12.31.~2015.1.1.), 구제역백신 미접종 농가에 과태료·정책자금지원 제외,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관리 강화 위한 AI 특별방역 추진
- [정부, AI 확산 예측 경로 분석 자료* 활용 안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로 예상 적중했지만 자료 외면하고 선제 방역 하지 않아 농가 피해 규모 증가
 - ※ 농식품부의 의뢰로 KT 빅데이터 프로젝트팀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축산차량 이동 데이터와 이동통신 위치 정보 데이터 등을 토대로 자료 만들어 9.25./10.1. 농식품부에 전달
- (정부 해명) AI 확산 예측 결과는 중간 자료이며, 현장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단계적 협의 추진 중, 실증적 모델 검증 거친 후 유효성 입증 시 빠른 시일 내 가축방역 정책에 활용할 계획

자료 : MBC(2014.12.29.) / KBSBSYTN·국민일보·서울신문·아시아경제·연합뉴스(2014.12.30.) / 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세계일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한겨레(2014.12.31.) / 국민일보·농민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2015.1.1.) / 농수축산신문·동아일보·서울경제(2015.1.2.)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구제역 관련」(2014.12.28.-31.)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보도자료_「정홍원 총리, 구제역·AI 대응상황 점검」(2014.12.31.)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2015~2019) 수립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12.30.)

□ 개요

- [정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확정·발표, 12.29.] 농어촌 지역 개발, 정주여건 개선 위해 복지·교육·일자리·안전 등 7개 분야, **46.5조 원*** 투입
 - ※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년~2014년) 34조 5천억 원 대비 35%↑ (7개 분야) 보건복지, 교육, 기초인프라, 경제활동다각화, 문화, 환경경관, 지역역량
- (취지) 도농 간 격차 완화,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
- (주요 특징) 일자리분야, 안전분야 신설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촌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 대폭 강화

□ 분야별 주요 정책 방향

- [보건·복지] **72,511억 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 (농어업인 특화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연금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및 결손처분 기준 완화* 검토, 경영이양직불농지연금 개선
 - ※ (현행) 무소득, 재산금액 300만 원 이하 → (개선안) 무소득, 재산금액 450만 원 이하
 - (의료취약지 해소) 응급·분만 등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원, 보건(지)소 등에 방문건강관리·한의학과건강증진 등 농어촌형 사업모델 개발·확산
 - (대상별 지원 강화) 이동식농이교실·주말돌봄방(2019년 35개소) 확충
 - (복지 사각해소) 읍면 복지기능 강화(2014~2015년, 시범사업) 및 보건-복지 연계지원 강화, 농협의 행복나눔센터(2017년 100개소) 확충
- 농어촌 국민연금 가입률: (2014) 63% → (2019) 70
 - 응급의료기관 부재 군 지역: (2014) 12개 → (2019) 5
 -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2014) 580개소 → (2019) 630
- [교육] **4,158억 원**, 농어촌 특성화학교·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역·교육정책 연계 강화
 - 스마트러닝을 위한 ICT 기반 확충 및 거점우수중학교 육성, 학교군(群) 공동 교육 과정 운영 지원(2017~2018년 시범) 등 공교육 서비스 확충

- 농어촌교육지원센터* 통해 소규모·복식학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진로상담교사 배치 확대로 농어촌 학생 진로교육 강화
 -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관리, 컨설팅, 관련 연구 수행(서울대학교교육지원센터, 2014.7.~)
- 농어촌학교·마을 등이 협업하는 교육공동체 육성, 학교의 지역사회 복합 공간화,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마을 내 평생교육지도자 육성

- 농어촌학교 ICT 기기 보급률: (2014년) 48% → (2017년) 100
 - 농어촌 거점중학교 육성: (2014년) 50개교 → (2017년) 80
 - 진로 상담교사 배치율: (2012년) 17.4% → (2019년) 95

- [정주생활기반] **139,666억 원**,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권 기반 확충
 - 읍면 소재지 등을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2017년까지 50개소)로 육성, 취약 지역의 주거 환경을 마을 단위로 종합 개선(2017년까지 40개소)
 - (생활계감형 인프라 우선 공급) 상하수도(2019년까지 면지역 82% / 도농복합사군 85%), 소형LPG저장탱크(101개소), 농촌형 교통모델(2015년 18개소)
 - 100MB급 인터넷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 ICT기반 교육문화·의료 여건 개선하는 행복한 농촌 마을 시범사업 추진
 - 공동생활홈 등 고령자맞춤형 공동시설 확충, 슬레이트칠거(매년 약 3만 동), 주택개량 등 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최대 950만 원)
- 농어촌생활권 중심지 육성(누계): (2014) 297개소 → (2019) 650
 -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2014) 71% → (2019) 82
 -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2014) 81% → (2019) 90
 - 농촌 주택개량 용자리원(누계): (2014) 1만 동 → (2017) 4 → (2019) 6
- [경제활동일자리] **39,859억 원**, 농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으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9개소) 지정 등 6차산업화 추진체계 정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현장규제 발굴·개선
 -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로 경쟁력 있는 주체 육성, 관광등급 평가 확대(2018년 까지 전체 마을로 서비스개선 유도, 유망 관광분야 육성)
 - (원활한 인력수급)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추진, 점수제 개편 등으로 양질의 외국인근로자 확보 및 근로자 처우개선

- 6차산업 사업자 인증수: (2014) 379개소 (예비인증) → (2019) 1,500
 - 국내 관광 중 농촌 관광 비중: (2014) 4.5% → (2019) 9
 -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수(누계): (2014) 13,000건 → (2019) 100,000

정책브리핑

- **[문화·여가] 17,803억 원**, 능동적 문화·여가 여건 조성 및 문화 일상화 지원
 -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등 농어촌형 생활문화공간 조성 확대, 문화소의 지역을 찾아가는 서비스 확충
 - ※ 농어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도서관(연 100개관), 박물관(연 33회), 미술관(연 15회)
 - 농어촌 향토 문화 복원·재창조 및 문화자원 전승·활용 지원

• 농어촌 사군 생활문화센터 조성: (2014) 16개소 → (2019) 138
 • 농어촌 문화마을 지정(누계): (2014) 2개소 → (2019) 50
 • 읍면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연2회 실시 비율: (2013) 34.7 → (2019) 50.0

- **[환경·경관] 64,470억 원**,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 **(쾌적한 환경 조성)** 생태관광지 및 농업유산 지장관리,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요령 제정,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시설, 축사 악취저감기술 지원
 -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및 중점수거기간 운영, 수거보상비 지원(2019년까지 757억 원)
 -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조성)** 발전소 폐열, 지열 냉난방시스템 보급

•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누계): (2014) 4개소 → (2019) 19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누계): (2014) 1,000개소 → (2017) 3,950
 • 가축분뇨 자원화율: (2014) 89.5% → (2019) 91.0

- **[안전] 126,460억 원**, 자연재해와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조성
 - 산사태·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예·경보 강화
 - 마을별 CCTV설치 확대 및 CCTV 종합관제센터구축(2019년까지 전국), 생활안전 지도 구축(2017년까지 전국) 추진
 - 농기계 대형화를 감안한 농어촌도로 규정 정비 및 위험구간 개선(2019년까지 108개소), 보·차도 분리 등 보행자 중심의 통행환경 조성

• 수리시설 정비율(누계): (2014) 47% → (2019) 62
 • 농업인 안전보험/어업인 안전공제 가입률: (2014) 60%/40% → (2019) 70/50
 • 마을별 방범용 CCTV 설치율: (2014) 30% → (2019) 50
 • 1만 명 당 보행 사망자 수: (2014) 0.6명 → (2019) 0.5

정책브리핑

2015년 상반기 달라지는 제도 (농식품·산림분야)

□ 개요

- **[기획재정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12.28.]** 26개 부처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 재구성하여 설명
 - ※ 환경·국토·해양(44건), 농식품·산림(32건), 보건복지·여성(24건), 교육·문화(16건), 국방·병무(13건), 고용노동(11건), 공정거래(9건), 산업·특허(7건), 세제(2건), 안전행정(2건)

□ 주요 농식품·산림분야

-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2015.6.~]**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2015.6 or 7.~]**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유통·판매 금지
 - ※ 혼합 금지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 적용, 위반업체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가규류에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 2015.1.~]** (기존) 가규류의 경우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조·판매 → (개선)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 의무화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보험료 자부담 축소]**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안전·화재)가입 지원 확대, 자부담 (기존) 50% → (개선) 20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2015.1.~]** 기준소득금액 (기존) 85만 원 → (개선) 91, 농업인 1인당 월 최대 40,950원 지원, 178천 명 지원 지원 금액 증가
- **[발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2015.1.~]**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을 발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 모든 발작물에 대해 25만 원/ha 지급
-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2015.1.~]** 쌀 고정 직접직불금 지급단가 인상(90만 원/ha → 100/ha) / 2년 이상 경작면적 1만㎡ 이상 또는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 원 이상 → 1년 이상 경작면적 1천㎡ 이상 또는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㉔ 정책브리핑

-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통해 농가 금융부담 완화, 2015.1.~] (기존) 3% → (개선) 2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2015.2.~] 대상품목 43개 → 46 / 종합 위험보장방식 배(12개 사·군)·단감(3) → 배(30개 사·군)·단감(12)·사과(3)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2015.1.~] (기존) 3만 원/3.3㎡ → (개선) 3.5/3.3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2015.2.~] (기존) 소: 600㎡ 초과, 돼지: 1,000㎡ 초과, 닭: 1,400㎡ 초과, 오리: 1,300㎡ 초과(2015.2.22.까지) → (개선) 소: 600~300㎡, 돼지: 600~300㎡, 닭: 1,400~950㎡, 오리: 1,300~800㎡
- [축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 2015.3. 예정] 육계 오리의 흙바닥에 사육, 한·육우, 말도 운동장 허용,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 [원산지 거짓표시 제벌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 강화, 2015.6.~]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해 형사처벌 + 과징금 부과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연장으로 유기 인증 농가의 소득 보장 확대, 잠정] (기존) 유기 5년 → (개선) 유기 5년 + 추가 3년 지급
-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확대, 2015.1.~] 지원 범위 확대 및 단기소득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으로 확대

㉕ 주요 기타 분야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세제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2016.12.31.까지 2년 연장)	행정경찰	•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상반기) •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기능(1.22.~)
환경·국토·해양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1.1.~)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1.1.~) • 초단기예보 및 단기(동네) 예보 기간 연장(3.~)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1.8.~)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1.2.~)		
문화·통신·미래	• 청소년 휴대폰 가입 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4.~)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 대상(1.~)		
고용노동	• 최저임금제 인상(1.1.~)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금액 확대(1.~)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2017. 말까지)		
보건복지·여성부	•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10.~), 시행시기는 백신조달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산모산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대상 확대(2.~)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연중 상시 운영(1.~)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1.1.~)		
산업특허	•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의무 부과(6.4.~) •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인상(1.1.~)		
보훈·국방·병무	• 독립유공자 손녀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1.~) •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1.~)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2월 입영자 부터~)		

자료 : 기획재정부(2014.12.28.)

㉕ 연구지원

연구지원 2014년 소비자물가동향

자료 : 기획재정부 · 통계청(2014.12.31.)

㉕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 [소비자물가지수] 109.04(2010년=100), 전년대비 1.3% ↑
※ 소비자물가 상승률(%): (2009) 2.8 → (2010) 3.0 → (2011) 4.0 → (2012) 2.2 → (2013) 1.3 → (2014) 1.3

㉕ 소비자물가 동향(%)

구 분	2013.12월	201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동월대비	1.1	1.1	1.0	1.3	1.5	1.7	1.7	1.6	1.4	1.1	1.2	1.0	0.8
전월대비	0.1	0.5	0.3	0.2	0.1	0.2	△0.1	0.1	0.2	△0.1	△0.3	△0.2	0.0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108.75, 전년대비 2.0% ↑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107.51, 전년대비 1.7% ↑
- [생활물가지수] 107.81, 전년대비 0.8% ↑
- [신선식품지수] 100.76, 전년대비 9.3% ↓

㉕ 부문별

- [농축수산물] 77.6, 전년대비 2.7% ↓,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농산물 공급 확대 (농산물 △10.0%, 축산물 9.5%, 수산물 2.0%)
※ 주요 변동품목(전년대비, %): 돼지고기(15.9), 쇠고기(국산, 6.2), 달걀(8.2), 파(△31.1), 양파(△41.0), 배추(△43.9)
- [공업제품] 326.6, 전년대비 1.3% ↑, 가공식품(3.7%) 가격은 상승하였으나, 국제유가 안정세에 따라 석유류 제품 가격은 하락(△4.3%)
※ 주요 변동품목(전년대비, %): 비스킷(13.0), 운동복(7.7), 점퍼(6.9), 우유(7.4), 휘발유(△4.8), 경유(△5.1), TV(△9.8)
- [전기·수도·가스] 49.0, 전년대비 3.9% ↑, 도시가스요금(6.4%) 및 전기료(2.2%) 상승
- [집세] 92.8, 전년대비 2.3% ↑

- **[공공서비스] 142.6**, 전년대비 0.8%↑, 하수도료 등 지자체 결정 서비스요금 상승(2.5%)
※ 주요 변동품목(전년대비, %): 하수도료(11.6), 택시료(6.4), 치과진료비(△2.3)
- **[개인서비스] 311.4**, 전년대비 1.7%↑, 외식서비스 요금과 기타 개인서비스 가격 모두 상승(외식 1.4%, 외식제외 1.8%)
※ 주요 변동품목(전년대비, %): 미용료(4.5), 학원비(고등: 3.1, 중등: 2.0), 학교급식비(△6.0)

■ 소비자물가 동향(% , %p) ■

구 분	전체	농 축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공업 제품	석유류	전가수도 가스	집세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
가 중 치	1,000	77.6	44.1	326.6	56.7	71.8	49.0	92.8	142.6	311.4
전년대비	1.3	△2.7	△10.0	9.5	1.3	△4.3	3.9	2.3	0.8	1.7
(기여도)	(1.27)	(△0.20)	(△0.43)	(0.21)	(0.43)	(△0.23)	(0.20)	(0.22)	(0.11)	(0.53)

■ 2014년 주요 농축산물 등락품목 ■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상승품목	부추(51.8), 오이(43.8), 파(22.8), 감자(19.5), 호박(19.2), 생화(16.8), 돼지고기(5.3)	꽃고추(55.2), 호박(31.8), 돼지고기(13.3), 쇠고기(수입:9.6), 쇠고기(국산:6.9)
하락품목	당근(-18.3), 배추(-11.2), 배추(-10.1), 굴(-6.1), 브로콜리(-6.1), 쌀(-1.2)	양파(-35.0), 배추(-27.1), 감(-25.8), 토마토(-15.3)

평가 및 향후 전망

- **[평가]** 금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에 이어 1% 초반의 안정된 모습 실현
- **(주요 원인)** 전년대비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른 공급 확대로 농산물 가격 큰 폭 하락(△10.0%),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제품 가격 하락(△4.3%)
- **[향후 전망]** 2015년 물가상승률은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측 상승 압력, 담배 가격 인상 등으로 2014년 보다 높은 2.0% 전망(2015년 경제정책방향, 12.22.)
- **(주요 내용)** △국제유가곡물 등 공급 측 요인은 세계적으로 양호한 수급여건으로 인해 당분간 안정세 지속, △농축산물의 경우 기저효과, 2015년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 불안 시 가격 상승 우려
- **[향후 계획]** 정부, 2015년 물가 불안요인 면밀히 모니터링,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 반영, 서민생활 밀접 물가 안정 노력, 유통구조 등 물가 구조개선 등을 통해 체감물가 안정 노력 지속

현장여론 농업·농촌에 대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의견

자료 : KRE리porter를 대상으로 장의정보실 자체 조사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4. 12. 1. ~ 12. 31. (총 26건)
- 수집대상: KRE리porter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농업·농촌에 대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의견

- 당장 농업의 2차, 3차사업 진입에도 많은 규제에 의한 제약이 있어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는 실현이 어려움. 가공시설 또는 체험장 운영에 대한 자금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 개선, 지도 등이 절실함.<김인남, 경북 상주>
- 규제 및 제도 심의기구를 만들어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 규제를 개선해 주길 요망함.<장석우, 충남 청양>
- 순수 농업시설에도 일반 건축물과 같은 용적률 제한이 있어 축사, 퇴비사, 농산물 가공시설 등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농업시설물에는 규제를 완화해 주길 바람.<유영조, 강원 영월>
- 농지 진입로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분할매각을 할 수 없어 시설물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됨. 소규모 국공유지는 탄력적으로 최소한의 진입로가 확보되도록 면적을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함.<임영애, 제주 제주>
- 소규모 농촌체험장에 ‘농촌체험학습 인증’이 요구되고 있음. 농업 체험, 식품 제조 현장 견학 등 위험요소가 없는 곳에는 이런 제도가 6차산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일부 위험한 체험장에 안전요원 배치, 시설물 점검을 의무화하고 감독하는 것에 더 주력해 주길 바람.<임충빈, 경기 안성>
- 관광농원 인허가가 까다롭고,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형 아닌 지역 소규모 체험장의 진입이 어려움. 기본 요건을 완화하고, 큰 자본 없이 인허가 하도록 개선해 도시민의 다양한 체험과 함께 체험농가의 농산물을 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직거래가 가능한 여건을 확대하면 좋겠음.<심광섭, 충북 충주>

☞ KRE리포트 현장여론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농어민 생산 활동에 필요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이미 고시되었거나 동의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재차 동의서 및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정소정, 제주 제주>

□ 기타 현장여론

- 한·중 FTA 타결에 따른 관세인하 품목 중 몇 개의 품목이 제외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농업피해를 안심할 수 없음. 시장 개방화로 손해나는 부분은 수출의 길이 열리는 타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함.<변해동, 강원 홍천>
-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특히 젊은 농업인이나 특화작목 생산농가는 혜택 받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음. 젊은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는 우선 지원이 요구됨.<윤석구, 경북 군위>
-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설치에만 치중하는 보조 및 지원 사업은 어려운 농업 현실에 오히려 지나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나친 지원금과 융자 보다는 더 근원적인 농업정책이 실행되길 바람.<김용덕, 경기 남양주>
- 귀농·귀촌 및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설치 시 농가에 보조금 또는 저리 융자금 지원이나 보조보다는 농업기반을 살리고 영농의욕을 북돋우는 장기적인 농업 발전 대책이 필요함.<임충빈, 경기 안성>
-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 및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제 도입 이후 지하수 관정을 가진 농가의 신고의무가 있으나 여전히 불법 지하수 이용이 만연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됨.<유영순, 충남 서산>
-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선정되었는데, 통신망, 통신기기 부재로 아직 사업에 착수를 못하고 있음. 현재 본 농장에 통신망이 없어 설치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아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함.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함.<김인남, 경북 상주>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설원예와 과수 농가에 지원하며, 시설원예 분야는 작물의 온·습도 등의 최적 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물(천·축창, 양액 등)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